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해촉을”

시 지급 주민지원기금 월급 등으로 무단 사용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전주시의 주민 지원기금을 주민들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전주시가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하는 4억원 중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1억6000만원을 위원장 월급과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으로 편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위원장이 사용한 운영비,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1억원의 운영비 사용 중단 △전주시의회 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철회와 해촉 결의안 △전주시의 위원장 해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주시가 폐기물매립장 주민들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4억원의 기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매립장 주변 20개 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에게 1년에 50만원 정도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1억6000만원이 넘는 돈을 위원장과 측근들이 운영비 명목으로 횡청망청 썼다”며 전

주시에 대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촉구했다.

또한 “매립장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대표에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면 뒤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위원장 직분을 이용한 뒤통 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전주시와 시의회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마을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할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대령폐기물 선별 작업 등 일자리도 순번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제치고 위원장 독단으로 배분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한 가구에서 협의체 위원과 감시요원, 일시 사역을 겸직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이 지난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차량의 매립장 이용과 관련 시공사인 태영건설로부터 받은 2000만원 가운데 20개 마을에 50만원씩 배분하고, 600만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갔는데도 사용처에 대해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기부금 내역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현 위원장은 태양광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발전기금은 8천여만원 가운데 7천여만원을 20개 마을에 지급하고 1400여만원이 남았다”면서 “운영기금 사용은 주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자립원 장애인 전원조치 완료

전주시가 시설폐쇄가 결정된 전주자립원과 자립인애원 거주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탈 시설 및 전원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이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대규모 이주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전주시는 신규 등록된 장애인거주시설인 금산백련마을에 기존 전주자립원 거주장애인 14명과 자립인애원 거주장애인 18명 등 총 32명에 대한 전원조치가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자립원과 자립인애원에 거주하는 장애인 129명 모두가 탈 시설 및 전원조치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완료한 장애인거주시설 욕구조사 및 탈 시설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다른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을 희망한 장애인 85명 가운데 군산 등 도내 거주시설에 43명을, 전남 화순 등 도외 시설에 10명을 각각 전원조치했다.

또한 탈 시설을 희망한 44명에 대해서도 탈 시설 공동생활가정 8곳과 탈 시설 체험 홈 2곳을 설치해 각각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공동생활가정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등 다른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애정도나 자립가능성, 욕구변화 등을 고려해 탈 시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해온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에 향상시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 강소기업 중국진출 꿈꾼다. 전주시 중소기업 ㈜인택은 21일 중국 국무원 소속 통신사 신화망 한국채널 ㈜후이런뉴미디어와 공동사업 전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 대책위 김승수 전주시장 주민소환 추진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지 않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항공대대 공사 착공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김승수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주시가 지난 15일부터 공사 인력을 대폭 늘려 공사를 강행하면서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

다”며 “전주시가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김승수 시장을 전주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3의 후보지 선정, 지원계획 수립 등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전주시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마늘 저장창고 텀 30대 덩미

급전이 필요해 일을 도와주던 이웃의 마늘을 훔쳐 내다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21일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정읍시 태인면의 한 저온창고에 들어가 시가 400만원 상당의 마늘 약 100여점을 미리 준비해 1톤 화물차량에 싣고 훔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고향에 내려온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훔친 마늘은 경매인에게 넘겨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친언니 신분증 위조해 대출 받은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단독(정운현 판사)는 자신의 친언니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권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7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친언니 명의로 위조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총 1000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이 물 속 사체의 과학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경찰, 물속 사체 과학실험 ‘눈길’

입수시점·부패속도 파악 위해 전북경찰이 국내 최초로 물 속 사체의 입수시점과 부패 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실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1일 김제의 담수호에서 인간의 피부와 유사한 돼지 4마리와 차량을 물속에 빠뜨려 사체의 부패정도와 증거물에 발생하는 수중생물·곤충을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번 실험은 전국 최초로 경·관·학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실험에서 전북경찰청은 법관총·수중실험 노하우를, 해양연구센터는 수중생물 연구역량을, 순천향대는 차세대 유전자분석기술을 각각 전북에 공동 연구로 이뤄졌다.

이날 실험에는 전북의대 법의학연구실, 국방부 과학수사, 육·해·군 중앙수사대 등 관련 기관과 전국 다이빙단체 협회, 한국수중과학회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실제 변사현장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계하기 위해 돼지에 의복을 입힌 채 차량과 함께 물에 빠뜨렸으며, 실험에 사용된 돼지도 동물보호와 실험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오는 8월 중 해경비안전본부의 전용부대에서 해수 실험을 진행, 담수와 해수를 오가는 교차 비교연구를 거친 실험 결과를 학술지 논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